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배포 : 일반
2018년 3월 14일
원본 : 영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CEDAW/C/KOR/8)를 2018년 2월 22일에 개최된 위원회 제1576차 및 제1577차 회의에서 심의하였다(CEDAW/C/SR.1576, 1577 참고). 위원회의 쟁점 및 질의 목록은 CEDAW/C/KOR/Q/8에, 대한민국의 답변은 CEDAW/C/KOR/Q/8/Add1. 에 수록되어 있다.

* 이하 위원회

A. 서문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 제출에 사의를 표한다. 또한 당사국의 후속 보고서 (CEDAW/C/KOR/Q/7/Add1), 세션 전 실무그룹이 제기한 쟁점 및 질의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 대표단의 구두 발표, 그리고 심의 중 위원회의 구두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에도 사의를 표한다.
3. 위원회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끄는 당사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높이 평가한다. 대표단에는 외교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기타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의 담당자가 포함되었다.

1) 위원회 제69차 세션(2018년 2월 19일 ~ 3월 9일)에서 채택됨

B.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2011년 제7차 정기보고서(CEDAW/C/KOR/7) 심의 이래로 당사국이 법률 개정에서 성과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 특히 다음 내용의 법률 채택 및 개정을 환영한다.

- (a)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이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지원망 조성(2017년)
- (b)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2014년)
- (c)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2014년)
- (d)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신 16주 이전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에게 유급 휴가 적용 확대(2012년, 2014년)
- (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육아휴직 대상에 입양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상한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올리고,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고용주도 직원과 함께 성희롱 방지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처벌(2012년, 2014년)
- (f)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2014년)
- (g)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2013년, 2014년)
- (h)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당사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가속화 및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

- (a) KOICA의 성평등 중기전략(2016~2020)
- (b)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6. 위원회는 이전 정기보고서 심의 이후, 당사국이 2015년에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C. 국회

7. 위원회는 본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데 입법권의 역할이 중대함을 강조한다 (2010년 제45차 회기에서 채택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위원회 성명 참고). 위원회는 국회에 현 시점부터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전까지 본 최종 견해의 이행과 관련해 국회 권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D. 주요 우려 분야 및 권고

유보사항

8.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1항(g)호에 대한 유보의 철회와 관련하여 당사국 유관 부처 간에 지속되어 온 협의가 2018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9.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사항(CEDAW/C/KOR/CO/7, 문단 11) 및 1998년 제9차 회기에서 채택한 유보 사항에 대한 성명을 상기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1항(g)호에 대한 유보가 본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고, 따라서 허용할 수 없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협약, 선택의정서, 위원회 최종견해 및 일반 권고의 가시화

10.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7)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를 알리려는 노력 및 본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법집행 공무원, 검찰, 사법부를 대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성들 자신이 종종 협약 상의 권리나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절차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지 못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1.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CEDAW/C/KOR/CO/7, 문단 13)을 재차 강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장려한다.
- (a) 본 최종견해, 협약 및 선택의정서, 위원회의 일반권고를 정부, 법집행 공무원, 검찰,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배포할 것
 - (b) 모든 여성, 특히 취약 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본 협약 상의 권리와 선택의정서 상의 권리 침해 주장 절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 (c) 본 협약 상 권리와 관련해 위에서 명시한 대로,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고할 것

여성 차별에 대한 정의, 차별 관련 법률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6년 및 2016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심의 중에 제공한 정보, 즉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제3차 국가행동계획(2017~2021)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2005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대전 시의회에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과 관련한 규정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에 주목한다.
13. 위원회는 이전의 최종견해(CEDAW/C/KOR/CO//, 문단 15)를 재차 강조하면서, 본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또 제2조 상의 당사국의 핵심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2010년)에 따라,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 그리고 취약집단의 여성, 즉 빈곤 여성, 민족·인종·종교·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여성 난민 및 망명신청자, 무국적 여성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및 노인 여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의 역외 의무

14.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성주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환경 정책, 특히 2020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유발하고, 여성 특히 임신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쳐 모성 및 아동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화석연료 및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을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검토하여 여성 및 여아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기구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5년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2017년 이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대통령 직속 총괄조정기구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2015년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단위의 모든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양성평등과 가족문제를 여성가족부 한 부처의 업무로 통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고착화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한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가 법적 기반이 부족하고 단 10명의 담당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가기구와 홍보에 관한 일반권고 6호(1988년)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하고 필요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 및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여 당사국의 여성지위향상 국가 기구를 총괄 조정하도록 할 것
- (b)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갖추도록 할 것
- (c)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제공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18.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2018년 신설된 여성인권팀이 급증하는 여성차별 관련 진정을 다루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젠더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충분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해 성별에 근거한 차별 관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한시적 특별조치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2002년 이래로 실시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참여와 관련해 제한된 성과만을 낳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2022년 계획의 목표가 2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10%, 4급 이상(과장급이상)은 21%로 목표치가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2015년 기준 여성 교장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28.7%, 중학교는 23.2%, 고등학교는 9.5%에 불과하고, 국공립 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14.2%라는 점도 우려한다.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 제4조제1항 및 위원회 일반권고 25호(2004년)에 따른 한시적 특별조치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모든 수준의 공립학교 및 학계, 그리고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위 직에서 동등한 여성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22. 위원회는 긴급전화 및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설치,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예방 및 보호 강화 조치 등 당사국의 젠더에 기반한 폭력 대응 노력에 주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조사와 기소가 가능했었던 친고죄의 폐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한다.

- (a) 형법 제297조 상의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부부간간을 관례에서만 아니라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CEDAW/C/KOR/CO/7, 문단 20, 21(e))이 이행되지 않았음
- (b) 가정폭력신고건수가 2013년의 160,272건에서 2016년 264,528건으로 증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정보호사건 건수가 2012년 494건에서 2016년 19,834건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 총 1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43.4%가 어떠한 형사처벌도 수반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법의 주요 목적이 가정 유지 및 회복에 있기 때문이고,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게 행정적 처벌인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음
- (c)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제도적인 선입견 및 성범죄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오해가 확산되고 이를 남성 단체들이 만들어내기도 하여, 여성 및 소녀들의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함. 성폭력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신뢰할만한 사람에게 알렸다고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해자의 성 이력이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고려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침묵하게 만들고 있음
- (d)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 성폭력 범죄가 현저히 증가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 비율은 낮으며 처벌이 관대함. 법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단지 사후 조치에 불과하고 예방적 조치는 될 수 없으며, 게다가 이 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는 관련 콘텐츠를 디지털 공간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디지털 장의사(digital undertaker)’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e) 고용노동부가 2012년에서 2016년에 접수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100건이 넘었는데, 이에 대해 기소 비율은 매우 낮으며 (2012년에서 2015년 접수된 1,674건 중 83건 기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금지한 고용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대한 기소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만 기소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임.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충분함
- (f) 학교 내에서 교사 등에 의한, 그리고 대학, 군대 등 공공 기관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생 비율이 높음
- (g)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센터, 보호소 등의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보고됨

23. 본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CEDAW/C/KOR/CO/7, 문단 21)을 참조하며, 일반권고 19호를 보강한 일반권고 35호(2017년)를 고려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5.2를 상기하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의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a)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부부강간을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할 것
-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이 법률의 목적을 피해자 및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특히 그 적용범위를 동성커플 및 그 가족들, 그리고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것.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상담기소 유예제도를 폐지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화해 및 조정 제도의 사용도 금지할 것. 가해자가 법적 제재 하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것. 그리고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체포 의무 정책을 도입할 것
- (c)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등 형사소송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보장해주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성이력이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d)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온라인 성폭력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성 성폭력을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공급자와 온라인 사업자가 성폭력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시 이러한 성폭력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

- (e)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방에 중점을 두어 수립할 것과, 가해자 처벌 조치를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17년 개정사항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
- (f)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 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당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신고 및 상담이 용이하도록 더욱 엄격한 비밀 유지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g) 북한 ‘이탈’ 여성을 위한 센터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해,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할 것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 제296조의2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범죄에 보편적 관할권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 외국여성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한다.
-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부재하고, 인신매매 관련 사항이 부문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점
 - (b) 연예공연업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예술홍행비자(E-6-2)로 입국한 이주 여성들이 종종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성희롱, 성폭력 및 기타 범죄에 취약하고, 가해자에 대한 소송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지 않는 한 추방되며, 북한 ‘이탈’ 여성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억지로 성매매로 내몰리는 상황인 점.
 - (c) 여성 및 여아 인신매매에 대한 저조한 기소율,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의 결여
 - (d)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 부족하여 성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수사 등을 포함, 강요 없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매매 착취 피해 여아를 비롯한 아동들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및 교화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음.
 - (e) 성매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결여.

25. 위원회는 이전 최종전해(CEDAW/C/KOR/CO/7, 문단 23)를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거주, 체류, 본국으로의 귀환 등 특별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외국 여성 및 여아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할 것
- (b) 현행 예술홍행비자(E-6-2)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을 고용하는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E-6-2 취업 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에 현장 방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인신매매 피해 여성 모두에게 임시체류비자(G-1) 제도를 보장하고, 검찰 당국에의 협조 의사 및 능력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할 것. 북한 '이탈' 여성이 생활 여건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할 것
- (c)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및 약취 범죄자에 대해 유죄 판결 건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 판결 집행 유예 건수를 줄이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 (d) 피해자 중심, 인권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여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대처할 것
- (e) 성매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것

“위안부”

26. 위원회는 일본에 내린 최종전해(CEDAW/C/JPN/CO/6, 문단 37과 38, 그리고 CEDAW/C/JPN/CO/7-8, 문단 28과 29)를 상기하고,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합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이후, 당사국이 취한 추가적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 중심 접근법에 기반해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당사국의 의도, 그리고 피해자/생존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을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으로 발표한 양자간 합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은 피해자/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

- (b) 피해자/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진실, 정의, 보상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지켜지도록 보장하고, 재할 및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등이 지체없이 포함되도록 할 것

정치 및 공적 생활에의 참여

28. 위원회는 2016년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17%(2012년 15.7%)에 불과하고, 총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53.2%(2012년은 51.9%)이며, 이에 비해 총 253석의 지역선거구 의석에서는 10.3%(2012년은 7.7%)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최소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있어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후보 중 10.5%만이 여성이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모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군지역 제외)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최소 1명의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여성의원은 각각 8.2%와 14.41%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 국회의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선거구 대비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국회 및 광역, 기초의회 선거시 정당들의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벌금부과 등의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에 2017년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이 '남녀 구분 전형'으로 인해 10.9%(2015년 9.9%)에 불과하다는 점, 성차별적 배치 및 승급 정책으로 인해 그 중에서도 5.7%만이 관리직이라고 보고되며,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했던 여성경찰 채용 우선 방침을 철회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찰의 '남녀 구분 전형'을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경위급 이상의 직급을 포함하여, 여성경찰관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 평화, 안보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4년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을 환영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1325 결의(2000년) 및 후속 결의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인권침해와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함을, 분쟁예방과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30호(2013년)에 의거, 다루도록 권고한다.

국적

34. 본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 (a) 당사국의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도의 부재로 미등록 이주 여성, 특히 미등록 미혼 이주 여성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놓이는 점. 이는 미혼모에 대한 지속적인 성차별적 사회적 낙인,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국회가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록 법안의 채택에 실패한 것에 기인한다는 점.
- (b)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직면한 어려움 및 귀화 절차에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 (c) 2012년 결혼이주여성이 거주기간 연장시 한국 배우자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 공무원이 여전히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3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등록을 위해, 병원 및 의료 전문가의 출생 신고 의무 등을 포함, 필요한 법과 절차를 도입하고 시행할 것
- (b)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귀화 절차를 현저히 간소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의 최대 법적 체류기간 내에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것
- (c)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정의 폐지내용을 엄격히 집행할 것

교육

36. 위원회는 과학 기술 등 여성의 수가 적었던 전공 분야에서의 여학생 비율을 높이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2015년 2월 마련되어 2017년 3월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생식과 보건만을 강조하고,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미혼모 가정 등 일부 가족 형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한시적 특별 조치, 즉 비전통 전공 분야에 취학을 희망하는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나 교육 기관 여성 비율 할당 등을 포함한, 보다 효과적인

인 조치 이행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당사국이 '학교성교육표준안'을 개정하여 차별적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연령별로, 증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

38. 위원회는 당사국의 지속적인 성별임금격차(2016년 35.4%)가 모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을 우려한다. 또한 당사국의 초단시간 노동자중 70.2%가 여성이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 상의 보호는 전무하거나 제한적인 반면, 이러한 여성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시 지역가입자로 할 수 밖에 없거나,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이후에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이전 최종전해(CEDAW/C/KOR/CO/7, 문단 31과 33)를 재차 강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엄중히 집행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의 성별임금격차 사례를 조사하는 역량을 크게 증대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시 엄격히 제재를 부과하고,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할 것
 - (b)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장할 것
 - (c) 인식제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남녀의 육아 휴직 제도의 혜택 수준을 제고하는 등, 육아 의무를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고할 것

보건

40. 위원회는 저소득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 보장 및 의료 보장 확대 등 여성에 대한 보건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정책들이 결혼한 여성과 임신한 여성, 그리고 그 가족의 건강문제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며, 간성인의 경우 그들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본인의 동의 없이 회복 불가능한 성 결정 처분, 불임수술 또는 '생식기 정상화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알려져 이에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건강 관련 법률 및 정책, 특히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관련된 것을 검토하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겪는 모든 여성을 포함하여 의료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의 권리보장과 비자발적 의료조치를 당하지 않을 간성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42. 위원회는 인공임신중절가 「모자보건법」상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 등을 포함해 일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남아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9월 인공임신중절을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정의하여, 의료진을 형사처벌 및 의료면허 정지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조치를 이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에 대한 합헌성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는 당사국 정보에 주목한다.
43.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CEDAW/C/KOR/CO//, 문단 35)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강간,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의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 등의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모든 여타의 경우에도 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고,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로 인해 합병증을 겪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임신중절 여성에게 양질의 수술후 돌봄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농촌 여성

44. 위원회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2016~2020)」에 성평등정책을 포함하여 여성을 남편과 동등한 조건 하에 농지의 공동소유주로 인정하고 여성 농업인의 국가연금제도의 가입 확대 및 직업 능력을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성 임원의 비중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2017년 말 기준 5.7%)과 농업협동조합에서 매우 낮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는 조합원 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최소 한 명의 여성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합에 가입한 여성조합원 수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과 농촌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34호(2016년)에 따라, 농촌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한 ‘여성어업인의 참여율 및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이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농업 조합에서 더 많은 여성 임원 임명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성평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결혼 및 가족 관계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민법 제781조제1항에서 부부가 혼인 당시 남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계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이혼시, 달리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배우자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부부의 재산이 분할된다는 점에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도 화해조정절차를 의무화하고, 온전한 가정의 보호라는 이념 하에 가정폭력을 행한 아버지에게도 면접교섭권 및 자녀양육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사실혼 상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부족한 점도 우려한다.
47. 위원회는 당사국이 민법 제781조제1항을 개정, 부계주의원칙을 폐지해 해당법이 본 협약의 제16조1항(g)호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전 권고사항 (CEDAW/ C/KOR/CO//, 문단 39)을 상기하면서, 당사국이 위원회의 혼인, 가족 관계 및 관계 해소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일반권고 29호(2013년)에 따라 혼인관계나 사실혼 해소 시 동등한 재산 분할을 규정하는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결정 이전에 가해자와의 화해 시도나 중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아동 양육 사건에서 가정 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고려하고 가족의 화해보다는 범죄 처벌에 우선 순위를 줌으로써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을 적절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호 확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

48. 위원회는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을 활용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의 조항들에 따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확산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 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번역된 최종견해를 모든 단위(중앙, 광역, 기초)의 관련 국가 기관, 특히 정부, 각 부처, 국회, 사법부 등에 시의적절하게 배포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다른 조약들의 비준

51. 위원회는 당사국의 9대 주요 국제인권협약²⁾ 가입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고취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52. 위원회는 당사국이 2년 내에, 상기 문단 13, 문단 23의 (b)와 (d), 문단 25(b)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차기 정기보고서 준비

53. 위원회는 당사국에 제9차 정기 이행보고서를 2022년 3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제출 지연시에는 제출 당시까지의 전 기간을 포함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통 주요 문서 및 조약별 문서에 관한 지침(HRI/GEN/2/Rev.6,I장 참고)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된 보고 통합 지침을 따를 것을 요청한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istr.: General
14 March 2018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8) at its 1576th and 1577th meetings (see CEDAW/C/SR.1576 and CEDAW/C/SR.1577), held on 22 February 2018. The Committee's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is contained in CEDAW/C/KOR/Q/8 and the respon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contained in CEDAW/C/KOR/Q/8/Add.1.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submission by the State party of its eighth periodic report. It also appreciates the State party's follow-up report (CEDAW/C/KOR/CO/7/Add.1) and its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raised by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as well as the oral presentation by the delegation and the further clarifications provided in response to the questions posed orally by the Committee during the dialogue.
3.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on its high-level delegation, which was headed by the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ung Hyun-back, and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B.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progress achieved since the consideration in 2011 of the State party's seventh periodic report (CEDAW/C/KOR/7) in undertaking legislative reform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r amendment of the following

- (a)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revised in 2017, designed to aid migrant women in creating social support networks;
 - (b)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in 2014;
 - (c)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revised in 2012 and 2014;
 - (d) Labour Standards Act, revised in 2012 and 2014, extending maternity leave to women experiencing miscarriage or stillbirth prior to the sixteenth week of pregnancy;
 - (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revised in 2012 and 2014, raising the age limit for children under care, including adopted children, for purposes of determining parents' eligibility for childcare leave, to under the age of 9 years, encouraging parents to take childcare leave and requiring employers to receiv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long with their employees, with sanctions for non-compliance;
 - (f)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king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revised in 2012 and 2014;
 - (g)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revised in 2012, 2013 and 2014;
 - (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revised in 2011, 2012, 2013 and 2014.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efforts to improve its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aimed at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such as the adoption of the following:
- (a) Midterm sectoral strategy, covering the period 2016–2020,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b) Second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ies, covering the period 2018–2022.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fact that, in the period since the consideration of the previous report, the State party has acceded (in 2015) to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

C. Parliament

- 7. The Committee stresses the crucial role of the legislative power in ensur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ee the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its relationship with parliamentarians, adopted at the forty-fifth session, in 2010). It invites the National Assembly, in line with its mandat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between now and the submiss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D.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Reservations

8. The Committee notes that continuing negotiations among relevant ministries of the State party regarding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to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will conclude in 2018.
- 9.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11) and its statement on reservations, adopted at its nineteenth session, in 1998, and considers that the reservation to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is therefore impermissible and should be withdrawn.**

Visibility of the Convention,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and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10.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to disseminate the Committee'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7), including by placing them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awareness-raising efforts regarding the Conven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It is, however, concerned that such efforts have not targeted law enforcement officials, prosecutors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and that women themselves are often not aware of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or of the complaints procedur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nd thus lack the capacity to claim their rights.
- 11.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13) and encourages the State party:**
 - (a) To ensure the dissemin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nven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s among all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prosecutors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 (b) To raise awareness among all women, in particular women belonging to disadvantaged groups, about their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rocedures that they may follow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claim violations of their rights;**
- (c) To promote capacity-building programmes for all relevant stakeholders, as stated, on the rights under the Convention.**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discriminatory laws

1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State party has yet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06 and 2016.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during the dialogue indicating that ac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would be taken and that the adoption of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would be covered by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covering the period 2017–2021. It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a separate law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has not been enacted since the repeal of the Gender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Relief Act in 2005.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in 2015,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quested the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to remove provisions related to lesbian,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from its Basic Ordinance on Gender Equality.
13. **Reiterating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CO/7, para.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direct, indirect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ffecting disadvantaged groups of women, such as women living in poverty, women belonging to ethnic, racial, religious and sexual minority groups,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stateless and migrant women, rural women, single women, adolescents and older women,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nd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8 (2010) on the cor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Extraterritorial State obligations

14.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for its efforts to mainstream gender into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mes. It takes note of its environmental policies, in particular those aiming to reduce fine dust by 30 per cent by 2022. It is, howev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energy policies relating to fossil fuel and coal-fired power plants, which result in greenhouse gas and other emissions, negatively affect women, especially pregnant women, as they increase rates of female and child mortality.

-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to ensure that they do not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life and health of women and girls.**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16.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in 2015 of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opera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its reinvigoration in 2017 and the State party's plans to convert it into an overarching coordination body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It also welcomes the designation in 2015 of gender equality policy officers in 47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17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 entities. The Committee is, however, concerned that merging responsibility for gender equality and family affairs issues under one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directly or indirectly entrench discriminatory stereotypes abou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women and men in the family and in society.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Permanent Cooperative Body on Gender-responsive Budgeting involving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lacks a legal framework and is staffed with only 10 officials.

- 17. Recalling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6 (1988) on effective national machinery and publicity,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stablish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with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equip it with the necessary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and a clear mandate to coordinate the State party's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 (b) Strengthen its mechanism on gender impact and analysis pursuant to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at all levels of government, by equipping it with adequate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 (c) Enact a legal framework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Permanent Cooperative Body on Gender-responsive Budgeting involving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provide it with the necessary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18.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Gender Equality Division, newly created in 2018, is not equipped to deal with the sharply increasing number of petitions concern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1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inforce the gender and women's rights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allocate sufficient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to strengthen its functions regard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2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been ranked among the lowest in the glass ceiling index of the 29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at the five-year plans to enhanc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ublic sector implemented since 2002 have yielded limited results with regard to the high-level participation of women in that sector. The Committee notes the modest targets in the plan for 2022 for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in the workforce of 10 per cent at level 2 and above and 21 per cent at level 4 (division-head level) and above. It is further concerned that, in 2015, women represented only 28.7 per cent of principals at elementary schools, 23.2 per cent of principals at middle schools, 9.5 per cent of principals at high schools and 14.2 per cent of professors at public and national universities.
- 2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use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with a clear time frame, in line with article 4 (1)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4) 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to ensure the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high-level public posts, including in public schools and academia at all levels.**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22. The Committee notes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by establishing emergency hotlines and centres that provide interim shelter to victims, increasing social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and taking measures to strengthen prevention and protection. It welcomes the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which removed the requirement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o file a complaint in order to have their cases investigated and prosecuted. Nevertheless,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following:
- (a) That the current definition of rape in article 297 of the Criminal Code requires proof of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that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to specifically criminalize marital rape in legislation, rather than only in case law (see CEDAW/C/KOR/CO/7, paras. 20 and 21 (e)), were not implemented;
 - (b) The increase in reported cases of domestic violence from 160,272 in 2013 to 264,528 in 2016; the increase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involving home protec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from 494 in 2012 to 19,834 in 2016; the fact that 43.4 per cent of the 16,868 home protection cases in 2015 did not entail any criminal punish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Act is to maintain and restore the family; and that violators of restraining orders are subject only to administrative fines;

- (c) The social stigma attached to, and the institutional prejudice against,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cluding the widespread misconception, generated in part by men's organizations, that reports of sexual violence are false, all of which deters women and girls from filing reports with the police; the bringing of defamation charges against victims who report to the authorities or notify confidants about violent sexual offences;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sexual background as evidence in judicial proceedings, which leads to secondary victimization and silencing of victims;
- (d) The significant increase over the previous 10 years in crimes involving sexual violence online; the low ratio of prosecutions and the lenient sanctions imposed on perpetrators; that the plans to have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delete and block criminal content upon the request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serve only as a post-facto measure and not a preventive one; and the fact that those plans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such that victims of such crimes have to resort to costly "digital undertakers" to have such content removed from the digital space;
- (e) The more than 2,100 complaint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receiv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between 2012 and 2016, resulting in a disproportionately low number of prosecutions (83 out of 1,674 cases between 2012 and 2015), including prosecutions for adverse measures taken by employers against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prohibited under article 14 (2)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owing to the fact that harm to the victim must be proved for prosecutions to stand, and that, failing such proof, the case is settled by payment of a fine for negligence; and insufficient monitoring of the State party's policies to prevent and protect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 (f) The high prevalenc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women, including by teachers, i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universities and the military;
- (g) The reportedly insufficient services of counsel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centres and shelters for female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3. The Committee refers to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CEDAW/C/KOR/CO/7, para. 21) and, taking into account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2017)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and recalling target 5.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its effort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 (a) Amend article 297 of the Criminal Code so as to place the lack of free consent of the victim at the centre of the definition and specifically criminalize marital rape;**
- (b) Ame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to ensure that the safety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ecomes its primary purpose, by, among other things, extending its applicability to same-sex couples or families and all women, regardles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bolish the system of suspending charges in home protection cases on condition of undergoing counselling or training on domestic violence, and prohibit the use of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in such cases; ensure that perpetrators are criminally punished under statutory sanctions; and adopt a policy of mandatory arrest for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 cases in which restraining orders are breached;

- (c)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abuse of criminal proceedings precipitated by the bringing of false charges against victims of sexual abuse, including by ensuring free legal representation for their defence, and prohibit the use of the victim's sexual background as evidence in judicial proceedings;**
- (d)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online sexual violence, including by enacting legislation that explicitly criminalizes such new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consider penalizing with considerable financial sanctions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and online distributors that fail to delete or block criminal content from their platforms and swiftly implement the plans to have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delete and block such criminal content, including upon the request of victims;**
- (e)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of management and oversight for cas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n particular concern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a focus on prevention, and ensure strict compliance with the amendment of 2017 to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providing for mandatory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
- (f) Ensure stricter punishment of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in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schools, universities and the military, take steps against the reinstatement of perpetrators in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and provide for stricter confidentiality to facilitate reporting and counselling;**
- (g) Provide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to centres for women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for effective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including in cases in which they experienced sexual violence.**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24. The Committee welcomes the ratification of the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 and the adoption of article 296.2 of the Criminal Code, establishing limited universal jurisdiction for crimes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e efforts made in providing support services to foreign women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Nevertheles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following:

- (a)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law on trafficking in persons, with aspects related to trafficking in persons remaining scattered across sectoral legislation;
- (b) The situation of migrant women who enter the country on E-6-2 visas granted to allow work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who often become victims of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for prostitution, are vulnerable to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other crimes and are deported unless they actively engage in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ir perpetrators, as well as the situation of women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forced into prostitution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 (c) The low rates of prosecution and conviction in cases of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lenient sentences for perpetrators and the lack of disaggregated data on victims;
- (d) The lack of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given that women engaging in prostitution without coercion are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 including as the result of sting operations by police officers who pose as sex customers, and that children, including girls, exploited for prostitution are not classified as victims and are subject to treatment and correctional education as “protected juveniles”;
- (e) The lack of information on exit programmes for women who wish to leave prostitution.

25.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 CO/7, para. 23)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act a comprehensive law on trafficking in persons that complies with the standards under the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 of support for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cluding foreign women and girls who require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on issues such as residence, stay and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 (b) Revise the current E-6-2 visa regime and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entertainment companies that recruit foreign women, including through in situ visits to establishments where women are working under that regime,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G-1 visa regime is applied to all female victims of trafficking, regardless of their willingness or ability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orial authorities, and design and implement policies on the basis of research into their living conditions that address the structural causes of women “defe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eing forced into prostitution;**
- (c) Take adequat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victions of perpetrators of trafficking and abduction of women and girls, and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suspended criminal sentences;**
- (d) Adopt an approach centred on victims and human rights in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with regard to women and girls;**

(e) Design and implement exit programmes for women who wish to leave prostitution.

“Comfort women”

26. The Committee recalls its concluding observations concerning Japan (CEDAW/C/JPN/ CO/6, paras. 37–38, and CEDAW/C/JPN/CO/7-8, paras. 28–29) and welcomes the additional steps taken by the State party since the publication, on 27 December 2017,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bilateral agreement of 28 December 2015 between the State party and Japan. It further notes the State party’s intention to implement follow-up measures on the basis of a victim-centred approach, and the opposition of victims/survivors and their families to the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 to distribute 1 billion yen received from Japan.

2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 announced jointly with Japan in December 2015, the State party takes due account of the views of the victims/survivors and their families;**
- (b) Ensure that the rights to truth, justice and redress of the victims/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are fully upheld, including through rehabilitation and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to be afforded without delay.**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28.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in 2016, only 17 per cent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women (compared with 15.7 per cent in 2012), whereas women accounted for 53.2 per cent of the 47 members elected on the basi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mpared with 51.9 per cent in 2012) and by comparison accounted for only 10.3 per cent of the 253 local constituency-based members (compared with 7.7 per cent in 2012).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require that at least 30 per cent of candidates nominated by political parties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be women, are not accompanied by enforcement mechanisms, so that only 10.5 per cent of candidates in the general elections in 2016 were women.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despite the provisions of the Act requiring political parties to nominate at least one woman candidate for elections to the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 councils in every local constituency (excluding rural districts), women accounted for only 8.2 and 14.41 per cent of those elected to the provincial and local councils, respectively, in the elections in 2014.

2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increasing the number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subject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vis-à-vis the local constituency-based seats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parliamentarians and that it introduce mandatory and enforceable gender quotas, subject to fines, for political parties for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council elections.**
30.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in 2017, women accounted for only 10.9 per cent of the total police force in the State party (compared with 9.9 per cent in 2015), owing to “sex-segregated recruitment practices”, that only 5.7 per cent of them were employed in managerial positions, owing to reported gender-discriminatory placement and promotion policies, and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portedly revoked its decision, taken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to give priority to the recruitment of female regular police officers.
3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the steps necessary to abolish the “sex-segregated recruitment” of police officers and 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police officers, including at the inspector level and above.**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32.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first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in 2014.
3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intain its dedication to ensur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and subsequent resolutions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in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s against wome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and the significant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building,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13)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Nationality

34.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 (a) The absence of a universal, compulsory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 State party, which puts children of undocumented migrant women, in particular undocumented unmarried migrant women, at risk of statelessness, owing to the persistent gender-discriminatory social stigma

attached to single mothers, and the failure by the National Assembly to adopt a draft law on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o foreign parents, for lack of social consensus;

- (b) The difficulties faced by migrant women married to mal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ength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 (c) That immigration officers at times still require migrant female applicants to furnish a sponsorship letter fro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xtension of legal residency, despite the enactment of a legal amendment in 2012 removing such a requirement.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dopt and implement the law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o foreign parents, including compulsory birth registration by hospital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 (b) Exped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naturalization process for migrant women married to mal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significantly shortened and is, in any event, concluded within the maximum length of legal residency in the State party;**
- (c) Strictly enforce the abolishment of the legal requirement of a sponsorship letter from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applying for extension of residency, including through capacity-building and training of immigration officers.**

Education

36.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ep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enrolling in non-traditional fields of study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ational school sex education guidelines released in February 2015, implemented in every school since March 2017, focus on fertility and sanitation, reportedly entrench gender-discriminatory stereotypes i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depict a negative image of certain types of families such as single-mother families.
37.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implementing mor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temporary special measures such as quota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argeted grants or loans for women and girls aspiring to enrol in non-traditional fields of study.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se its national school sex education guidelines by eliminating discriminatory stereotypes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an age-appropriate, evidence-based and scientifically accurate manner.**

Employment

3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persistence of the gender gap in pay (amounting to a difference of 35.4 per cent in 2016) in the State party, which remains the widest among all OECD countries.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70.2 per cent of short-time workers in the State party are women, that there is no, or limited, protection for them under labour laws such as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nd that they may enrol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nly as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and in employment insurance programmes only after three months of continuous employment.
39.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DAW/C/KOR/ CO/7, paras. 31 and 33)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Strictly enforce the Equal Employment Act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in particular by drastically increasing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to investigate cases of gender gaps in pay, strictly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and introduce a wage notification system for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 (b) Enhance the protection of female short-time workers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 (c) Continue to conduct awareness-raising campaigns and expand benefits, such as by raising the benefit level for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so as to enhance the incentives to share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between parents.**

Health

40. The Committee welcomes the efforts to improve health-care services for women, including the expansion of social and health-care services for older women with a low income. It is, howev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polici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narrowly focus on the health of married and pregnant women and family health.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access by transgender persons to medical services is reportedly restricted and that intersex persons are reportedly subjected to irreversible sex assignment surgery, sterilization or "genital normalizing surgery" without their informed consent.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health legislation and polici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of women, and take corrective action, if required, in order to advance substantive gender equality in the health sector to include all women subject to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transgender persons have a right of access to medical services, inclu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at intersex persons are not subjected to involuntary medical interventions.

42.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that, even though abortion is legal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cluding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cases of rape and incest, it remains a punishable offence under the Criminal Code.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September 2016,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edly defined abortion, in violation of the Act, as an unethical medical practice, thereby subjec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to criminal punishment and medical licence suspension. The Committee, however, welcomes the fact that that policy measure was later withdrawn and in that regard takes not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indicating tha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was being consi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35) and, in view of the fact that unsafe abortion is a leading cause of 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legalize abortion in cases of rape, incest, threats to the life and/or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or severe fetal impairment, and to decriminalize it in all other cases, remove punitive measures for women who undergo abortion and provide women with access to high-quality post-abortion care, in particular in cases of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unsafe abortions.**

Rural women

44. The Committee notes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to incorporate gender equality policies into the fourth five-year framework plan to cultivate female farmers, covering the period 2016–2020, to recognize women as co-owners of their farms on equal terms with their husbands an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farmers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improve their vocational capabilities. It is concerned, however, at the very low proportion of female directors in regional fisheries (5.7 per cent at the end of 2017)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despite legal requirements to appoint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if the number of women who are members reaches a 30 per cent threshold, which is an indication of the low level of membership of women in such cooperatives.
45. **In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4 (2016) on the rights of rural wom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improve the situation of rural women through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by implementing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project sponsored by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aimed at improving the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of women in the fisheries industry.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strong measures aimed at appointing more women as directors in fisherie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ensure that women's voices are heard and gender concerns fully considered.**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rticle 781 (1) of the Civil Code maintains the patrilineal principle, as it stipulates that a child may assume the mother's surname only when the father so agrees at the time of marriag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upon divorce, marital property is divided in accordance with each spouse's relative contribution, unless they agree otherwise in a contract.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a reconciliation procedure is mandatory even in cases of divorce based on domestic violence and that the ideology of preservation of the intact family leads to the awarding of visitation rights and child custody to abusive fathers. It is further concerned at the lack of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afforded to women in de facto unions.
- 47.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amend article 781 (1) of the Civil Code to abolish the patrilineal principle in order to bring its laws into line with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EDAW/C/KOR/CO/7, para. 39) that the State party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incorporate a rule of equal distribution of marital property upon the dissolution of a marriage or de facto union,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29 (2013)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rriage, family relations and their dissolution. The Committee also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victims of domestic abuse seeking divorce are not forced to undergo reconciliation attempts or mediation with their aggressors prior to a divorce being granted and that members of the judiciary receive adequate mandatory training on the requirement to take gender-based violence in the domestic sphere into account in child custody cases, and to give priority to the prosecution of crimes over family reconciliation, in order to adequately punish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event its recurrenc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extending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to women in de facto unions.**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48.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use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in its effort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49. The Committee calls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gender e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roughout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issemination

- 5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e timely dissemin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tate party, to the relevant State institutions at all level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in particular to the Government, the ministri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to enable their full implementation.**

Ratification of other treaties

- 51.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dherence of the State party to the nine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³⁾ would enhance the enjoyment by women of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ll aspects of life. The Committee therefor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o which it is not yet a party.**

Follow-up to the concluding observations

- 52.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within two years, written information on the steps take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13, 23 (b) and (d) and 25 (b) above.**

Preparation of the next report

- 53.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ninth periodic report in March 2022. The report should be submitted on time and, in the event of delay, should cover the entire period up to the time of its submission.**
- 54.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follow the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guidelines on a common core document and treaty-specific documents (see HRI/GEN/2/Rev.6, chap. I).**

3)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